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해 도민 건강권 보장해야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인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8> 의료서비스 차별 없어야

지난 6월 14일 진도의 조그만 섬 가사도에 해군함이 됐다. 섬마을 주민들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위해 군함까지 동원된 것이다. 3개의 수술실과 60여 개의 병실을 갖춘 한산도함은 거대한 백신접종센터로 변신해 14일부터 24일까지 여수시·완도군·진도군 등 3개 시군 28개 섬 681명에 대한 해상 순회 접종을 무사히 마쳤다. 방역당국은 섬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단 한 번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안전 백신을 제공했다.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전남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환경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다. 건강 지표 전국 최

섬 많고 고령화...의료 접근성 꼴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 없어
지역실정 맞는 의사 양성 대학 필요
정부·정치권·의사단체 협조 절실

하위, 의료 인프라 및 의사 태부족 상황을 개선할 최적의 카드가 국립 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이기 때문이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사에게 치료 받고 건강하게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첫 단추는 전남권 의대 신설이라는 것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전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만 운영되는 불균형을 조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과 정치권, 의사단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과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

안 사업 지원 건의 목록 맨 상단에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올려두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가 수년째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이유는 열악한 의료 서비스 환경 때문에 도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의료지표로 여실히 드러난다. 전남지역의 기대수명은 80.7세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최고인 서울(83.3세)과는 2.6년 차다. 1인당 의료비 역시 241만원으로 전국 1위이며, 최저인 경기지역(161만7000원)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응급 의료 취약 시군 99곳 가운데 17곳이 전남 22개 시군에 쏠려 있다. 10만 명당 치료가가능자도 전국 평균은 50.4명인데 전남은 54명에 이른다. 만성질환이 많고 의료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2019년 기준, 22.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 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는 뇌혈관의 경우 0명, 소아외과 0명, 응급의학과 1.4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연간 80만명(누적)의 도민이 치료를 위해 타지역으로 가서 약 1.5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전남도 조사 결과도 있다. 전국 3348개의 섬 가운데 64.7%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이 전남에 산재해 있다는 점도 전남권 의대 신설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전남 실정에 맞는 의사를 신설될 전남권 의대에서 양성해 전남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도 전남권 의대 설립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21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토론회'에서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라며 "인근 광주지역 의대에서의 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졸업 후 수도권이나 광주에서 대다수가 근무해 전남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전남권 의대 설립에 힘을 실었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의 의대 교육과정으로는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이 불가능하다"며 "의료취약지 특성(섬과 농촌 등)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한 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이 광주전남연구원 농어촌활력연구실장은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의료 인프라와 의료비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로 지역 필수 의료 분야 의료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지역균형뉴딜부터 첫 방문지로 신안에 와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1일 총리 재임 당시 목포 의과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에만 의대가 없는 것은 이상하다.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고 확인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8일 "전남권 의대 신설안을 의정 협의체와 논의에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의대 정원 확대(10년간 4000명 추가) 및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내놓으면서 '의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계획 발표 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의사단체 집단 휴진에 밀려 원점 재검토 선언을 한 뒤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만세삼창하는 이용섭 시장 |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국회의원, 구청장, 광복회원 등 내빈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광주시 '현장 경청의 날', 민원 해결 창구 안착

시민과 직접 소통해 불편을 해소하는 광주시 '현장 경청의 날' 행사가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해내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장 경청의 날은 이용섭 시장이 시민권위원회와 함께 민생·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교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3년간 도로·교통 분야 10회, 복지·건강 6회, 출산·보육 3회, 재난 안전 3회, 도시 건축 2회, 환경 1회 등 모두 25회에 걸쳐 논의된 민원 가운데 13건은 해결됐으며 12건은 논의 사항이 추진 중이다.

15년 이상을 끌었던 고속도로 상행선 간이 버스

정류장 설치, 운암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관련 대책, 제석산 생태복원 사업, 공구의 거리 침수 피해 예방 대책 등이 소통의 결과물이었다.

현장 경청의 날은 전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언론 보도, 동향 등을 분석해 시민 불편을 확인하고 시민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운영된다.

주재희 광주시 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 안전, 환경, 복지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세·마을버스 운전기사에 광주시, 소득안정자금 지원

광주시는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법인 소속 기사나 개인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6월 13일 이전 입사해 8월 13일 현재 근무 중이어야 한다. 마을버스 기사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1인당 정부 지원 소득안정 자금 80만원이 지급된다.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운송중차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운전기사는 전세버스 869명, 마을버스 82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적극행정위원회' 본격 활동

공직자 적극행정 보호

전남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보호할 '전남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아직까지는 생소한 적극행정위원회는 낯은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공직자에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업무 추진 방향을 알려 주고, 업무추진 시 발생하는 감사나 징계로부터 담당 공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청년대표, 전·현직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문규주 전남도 행정부지사(위원장)를 맡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상반기 법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와 전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공무원 14명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공적에 적합한 특전을 부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지난 7월 6일까지 중대본 및 지자체의 방역대응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에 관계없이 지급되나,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의 경우 중대본과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장기)인 사업체와 6주 미만(단기)인 사업체로 나뉘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 이상(장기) 유형과 13주 미만(단기) 유형으로 구분해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업종 112개에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

업종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금은 대상 기준별 1차에서 4차까지 나온다. 1차 신속지급은 17일부터 시작하며, 대상 업체는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2차 신속지급은 30일부터다. 대상 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 확대(10~20%)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1차, 2차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3차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들어간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4차는 1~3차 지급신청 후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로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부터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락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신속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밥전문점 등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 입구)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상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